농촌을 청년의 꿈터·일터·삶터로 만들자



내일신문 2021년 9월 16일자

김홍상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원장

저출산 고령화가 시대적 화두다. 65세 이상 고령자 비율은 2020년 16.4%로 전 세계 어떤 나라보다 빠르게 고령사회가 되고 있다. 농촌은 2013년부터 고령자 비율이 20%를 넘어선 초고령사회에 진입, 지역소멸 위협에 처해 있다. 농업·농촌의 지속가능성을 위해서는 청년세대가 유입되고, 감소하지 않게 하는 것이 시대적 현안이 됐다.

최근 삶과 일의 균형(워라밸)을 추구하려는 사회적 현상이 지속되면서 귀농·귀촌 흐름이 지속되고 있는 것은 농촌의 인구 유치 측면에서는 그나마 다행이다. 코로나19로 인해 원격 근무가 가능한 비대면 경제가 활성화되고, 고밀도 도시보다는 저밀도 농촌 지역에 대한 선호가 늘어나면서 국민들의 농촌 지향성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50만명 가까이가 농촌으로 유입되고 있는 가운데, 30대 이하가 유입 인구의 절반가량을 차지하고 있다. 이는 청년세대의 농촌 지향성을 보여주는 것으로 농촌 인구 유지관점에서 위안이 된다.

청년세대는 디지털 환경에 익숙하며, 남과 다른 이색적인 경험과 존재감을 추구하는 특징을 보인다. 이러한 청년들의 역량과 특성을 실현하는 데는 어쩌면 도시보다 농촌이 더 적합할 수 있다. 농촌은 미래 변화된 희망 공간이 될 수 있다.

행정안전부가 2018년부터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청년마을' 조성사업은 15곳에서 운영되어 청년들의 다양한 농촌 활성화 성과를 보여주고 있다. 지역 전통자원과 기술이 재발견되고, 유휴시설이 지역 거점시설로 거듭나고 있다. 서천의 '삶기술학교'는 이 사업을 통해 63명의 청년들이 지역에 정착했고, 350여개 지역 살리기 프로젝트를 수행했으며, 19개의 지역 시설을 리모델링해 유용하게 활용하고 있다.

우리 농촌에는 3만7000여개 마을이 있다. 이 중 다수가 고령화로 인해 마을에 일할 사람이 없는 지역소멸 위기에 처해 있다. 도시 청년의 일자리와 주거 문제를 해소하고, 농촌의 활성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청년세대의 농촌 마을로의 유입 정책을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다. 마을별로 청년들이 자신들의 아이디어를 접목할 기회를 주면 청년 일자리 창출뿐만 아니라 농촌 활성화 실현도 가능하다. 위기에 처한 청년들과 농촌 모두에게 기회가 된다. 지자체들은 이미 청년 유치와 관련한 성공의 경험을 갖고 있다. 전남의 '전남에서 먼저 살아보기', '청년마을로 프로젝트', 경북의 '청정경북 프로젝트', '도시청년 시골파견제'와 같이 청년들이 농촌에서 일정 기간 살아보고, 그 경험을 토대로 농촌에서의 취·창업의 형태로 새로운 일을 벌여 시행착오를 줄이게 하는 사업들이 성과를 거두고 있다. 올해 초 농림축산식품부도 '농촌에서 살아보기' 사업을 시작했다.

그동안 농업 중심의 청년 유입 정책에서 벗어나, 다양한 관심사와 재능을 가진 청년들이 농촌 마을에서 자신의 꿈을 실현토록 해야 한다. 특정 지역의 시범사업 위주의 농촌 마을 개발사업에서 벗어나 삶의 질 관련 분야에서 안정적으로 일할 근간 청년 활동가와 사업가를 육성해야 한다. 청년들에게 일정 기간 기초 생활을 보장하며 농촌 생활기술교육과 더불어 새로운 미래를 농촌에서 그려나가는 중장기 계획을 추진한다면, 우리 농촌 마을은 청춘들에 의해 살아 숨 쉬는 지속가능한 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변화 속에서 후계농업인의 삶이 다양해지고 윤택해져 이농을 고민하지 않게 될 때 농업경영의 지속성이 보장될 것이다.